

“전국의 270개 분야별 전문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온오프라인에서 1천여 명이 모니터하고 정량·정성평가하는 17년 전통의”

보도자료

2015. 12. 10. (총 39매)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우) 137-869 서울 서초구 명달로 52-9 소강빌딩 전화. 02) 523-8760~7 goodlaw@goodlaw.org 공동사무국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19-4) 종합평가회 및 국감 우수상임위·우수의원 시상식

◆ 일시 : 2015. 12. 10.(목) 14:00 ◆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2층)

== 국회(의원)가 모든 국가기관들을 제대로 감사하는지를 모니터·평가한 국감NGO모니터단 보고서 ==

1. 귀 신문사와 방송사의 행운을 기원하오며, 해마다 우리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 따뜻한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15대 국회 말부터 2015년도 정기국회까지 17년 동안 전국의 ‘국감현장’을 종합 모니터하고 엄정평가한 ‘국정감사NGO모니터단’(공동단장 김대인 법률연맹 총재 외 20인)은 “2015년도 국정감사 평가회 및 우수의원 시상식”을 **2015년 12월 10일 (목) 오후 2시,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2층)**에서 개최합니다.
3. 이번 국감종합평가회 및 시상식의 큰 의미는 입법부 등 국가 5부를 총 점검하는 국정감사를 엄정하게 모니터·평가하며, 우수국회의원을 선정·발표하고, 우수 국회의원 여러분들을 격려함으로써, **국회의 4대 기능회복·활성화를 통한 국가(5부)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에, 귀 언론사에서 본 모니터단의 국정감사 종합평가회 및 시상식을 국민(유권자)들에게 ‘정확하고 유익한 유권자 정보’로써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정감사(19-4) 총평 및 우수국회의원(모범·위원장) 수상자 명단 1부. 끝.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문의 : 홍 금 애 공동집행위원장, 윤 소 라 공동사무국장, 02-523-8760~7》

2015년도 국정감사(19-4) 우수상임위·우수의원 명단

(전국의 270개 NGO가 연대한 17년 전통의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

■ 국정감사 모범국회의원 (국회직, 위원회, 가나다 순)

정갑윤 부의장 (새누리, 법제사법위)	우윤근 의원 (새정치, 법제사법위)
이주영 의원 (새누리, 외교통일위)	장윤석 의원 (새누리, 산업통상위)
주승용 의원 (새정치, 산업통상위)	천정배 의원 (무소속, 국토교통위)

■ 우수 상임위원회(장) (국회법 37조 위원회 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이상민, 새정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홍문종, 새누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김우남, 새정치)	

■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국회법 37조 위원회 순)

위 원 회	선정/현원	국정감사(19-4) 우수상 수상의원님 <존칭 생략, 가나다 순> 우수상임위는 1명씩 추가선정함. ()안은, 새(새누리당), 민(새정치민주연합), 정(정의당).
국 회 운 영	5/28	김용남(새), 김종태(새), 신정훈(민), 이종배(새), 최민희(민)
법 제 사 법	5/16	서영교(민), 이한성(새), 임내현(민), 전해철(민), 홍일표(새)
정 무	6/24	강기정(민), 김기식(민), 박병석(민), 신동우(새), 이상직(민), 이운룡(새)
기 획 재 정	6/26	강석훈(새), 김현미(민), 류성걸(새), 박원석(정), 심재철(새), 오제세(민)
미 래 창 조 과학 방송 통신	7/23	배덕광(새), 민병주(새), 우상호(민), 유승희(민), 전병헌(민), 정호준(민), 조해진(새)
교 육 문 화 체육 관 광	7/30	김태년(민), 박대출(새), 서용교(새), 유기홍(민), 윤관석(민), 윤재옥(새), 이상일(새)
외 교 통 일	5/23	김세연(새), 김영우(새), 심재권(민), 원혜영(민), 정세균(민)
국 방	4/17	유승민(새), 윤후덕(민), 주호영(새), 한기호(새)
안 전 행 정	5/21	강기윤(새), 박남춘(민), 이철우(새), 정청래(민), 진선미(민)
농 립 축 산 식품 해양 수 산	5/19	박민수(민), 안호대(새), 유성엽(민), 이이재(새), 황주홍(민)
산 업 통 상 위 원 자	7/30	김동완(새), 김한표(새), 백재현(민), 오영식(민), 이원욱(민), 이정현(새), 추미애(민)
보 건 복 지	5/21	김성주(민), 김제식(새), 문정림(새), 양승조(민), 이명수(새)
환 경 노 동	4/16	권성동(새), 민현주(새), 우원식(민), 이인영(민)
국 토 교 통	8/31	김희국(새), 민홍철(민), 박덕흠(새), 변재일(민), 이노근(새), 이연주(민), 이윤석(민), 이현승(새)
여 성 가 족	2/16	강은희(새), 박혜자(민)
계	81/341	기준은 상임위원 25% 이내 - 13개 본상임위원 수상의원 74명 (총 297명 중 24.91%)이며, 겸임 위원회 (윤영28, 여성가족16)포함 총 341명 중 수상자는 (새)39, (민)41, (정)1명 우수의원 총81명(23.75%), 모범위원 6명 (새-3, 민-2, 무-1)까지 포함하면 총87명 (25.51%). 우수상임위원장 3명(새-1, 민-2)까지 포함하면 총90명 (26.39%)

2015년도 국정감사(19-4) 우수상임위원장, 모범·우수국회의원 통계

① 정당별 (모범의원 포함)

구분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무소속
선정의원(명)	42	43	1	1
전체의원(명)	159	128	5	5
선정비율(%)	26.42%	33.59%	20.00%	20.00%
겸임상임위포함(명)	182	147	7	5
선정비율(%)	23.08%	29.25%	14.29%	20.00%

※ 국회의장은 감사위원이 아니므로 제외함. 국정감사 당사를 기준으로 통계함 <운영, 여성가족위원회 포함 의원수>

② 당선횟수별 (모범의원, 우수상임위원장 포함)

구분	초선	재선	3선	4선	5선	6선	7선
선정의원(명)	45	23	14	6	2	0	0
전체의원(명)	152	67	49	17	8	3	1
선정비율(%)	29.61%	34.33%	28.57%	35.29%	25.00%	0.00%	0.00%

※ 정의화 국회의장(5선) 불포함 (국감당사의 심학봉 초선, 김재윤 3선, 조현룡 초선, 송광호 4선 의원 포함 297명)

③ 여성의원

구분	여성의원(명)	우수의원(명)	선정비율(%)
의원수(명)	46	12	26.09%

※ 감사위원 297명 중 여성감사위원의 비율은 15.49%임

④ 지역구 / 비례대표 (모범의원 포함)

구분	비례대표	지역구	계
선정의원(명)	10	77	87
전체의원(명)	52	245	297
선정비율(%)	19.23%	31.43%	29.29%

※ 지역구 의원 246명 중 국회의장은 국감위원이 아니므로 정의화 국회의장님 제외

수 지역구 의원의 선거구별 (모범의원, 우수상임위원장 포함)

광역시도	전체의원	선정의원	비율(%)	광역시도	전체의원	선정의원	비율(%)
서울특별시	48	16	33.33%	강원도	9	3	33.33%
부산광역시	17	4	23.53%	충청북도	8	4	50.00%
대구광역시	12	5	41.67%	충청남도	10	4	40.00%
인천광역시	12	3	25.00%	전라북도	11	4	36.36%
광주광역시	8	4	50.00%	전라남도	11	6	54.55%
대전광역시	6	2	33.33%	경상북도	15	4	26.67%
울산광역시	6	2	33.33%	경상남도	16	6	37.50%
세종시	1	0	0.00%	제주도	3	1	33.33%
경기도	52	12	23.08%	계	245	80	32.65%

※ 지역구 의원 246명 중 국회의장은 국감위원이 아니므로 국회의장 지역구인 부산 지역구 1명 제외

2015년도 국감 총평 및 우수상임위, 모범·우수의원 선정

— 전국 270여개 NGO가 연대한 17년 전통의 국정감사NGO모니터단 —

■ 국감 평가회 겸 시상식 개요

국정감사NGO모니터단(공동단장 김대인 외 20인)은 270여개 NGO로 구성된 17년 전통의 국정감사 종합모니터단으로서, 서울지역은 물론 전국의 국정감사 현장에 매 피감기관 당 3~5명씩 매일 70여 명 연인원 1,000여 명의 현장모니터위원을 파견하여, 국정감사위원인 국회의원의 출결 및 이석현황과 질의응답 상황과 내역을 날날이 모니터하였다.

또한, 국회방송 NATV와 인터넷 방송을 통한 모든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와 297명 감사위원 전원의 홈페이지를 국감시작 전부터(종료 후까지) 모니터하면서, 입수가능한 모든 국감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우리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수집된 자료를 지난 17년간 공개하고 있는 정밀·공정한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하였으며, 평가하여(모니터방법과 평가기준은 이하에) 그 결과 선정된 제19대 국회 제4차년도 국정감사 모범·우수국회의원 및 우수상임위원회에 대한 “2015년도 국정감사 종합평가회 및 우수 상임위·국회의원 시상식”을 2015년 12월 10일(목)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2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 2015년도 국정감사 총괄평가

1. 2015년도 국정감사는 D학점

국회의 헌법상 권한(헌법 제61조)이요, 국회가 정부를 감시·견제하는 의정활동의 백미(白眉)라고 하는 국정감사이지만, 제19대 제4차년도(2015년도)는 국민의 기대 수준에 크게 못 미친 함량미달(D학점) 국정감사였다.

마음이 지역구와 공천에 가있는 감사위원들(국회의원)과 708개에 달하는 역대최고의 피감기관, 4000명의 증인과 참고인으로 인해 부실해 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시작된 국정감사가 결국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논란(교문위 마지막 날 파행), 총선관련 여야당의 내홍, 선거구획정 등에 함몰되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본다.

2. 여야 당대표와 선거구 획정 논란이 국감부실의 최대요인

이번 국정감사에서 (1) 국정감사 초반부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는 재신임 투표 문제를 들고 나와 언론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당을 내홍에 빠뜨렸고, 국정감사에서 날 선 창 의 역할을 해야 할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들이 국정감사에 집중하지 못

하였다. 결국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광주광역시 동구)은 9월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야권의 창조적 재편과 새로운 대안 정치세력 건설을 위해 나서겠다'며 새정치민주연합 탈당을 공식 선언하기도 했다.

또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감 전부터 오픈프라이머리 등 공천방식으로 언론의 관심을 집중시켜 국정감사기간을 총선정국으로 바꾸어 놓았으며, 2차 국정감사에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예정된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하는 등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와 관련한 새누리당의 내홍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정감사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등 두 당대표들의 국정감사 무력화는 점입가경의 상태였다.**

(2) 9월 21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수를 최소 244석에서 최대 249석 사이에서 결정하겠다고 발표하여 여야의견이 분분하였는데, 추석 후 제2차(10월 1일~8일)국정감사 기간에는 지역구 의원은 물론 비례대표 의원까지 관심이 선거구획정에 집중되어 본회의장 밖에서의 시위 등 지역국감에 불참하거나 질의시에만 참석하였다가 가는 메뚜기식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다. 국감 기간에 농성을 강행했지만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3. 파행, 총선거냥 지역구 챙기기, 소모적 정쟁 여전

국감 첫날부터 '신동빈 롯데회장 증인출석 문제'로 정무위가 파행했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문제'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총선 필승 견배사'로 행정자치위가 파행을 하였으며,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개혁'과 관련하여 파행을 하였다. 보건복지위의 '메르스 증인 불출석 파행' 등등을 비롯하여, 피감기관의 발언과 답변행태에 따른 정회 등이 많았고, 최초의 메르스 국정감사였으나, 정작 메르스의 원인분석과 대책조명은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소모적 정쟁과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의 지역구 챙기기 등으로 제대로 된 국정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4. 여당대표 사위 마약- 박원순시장 아들 병역 '공방' 반복 : 벌써 대선국감(?)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위원회 등에서 야당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둘째사위 마약사건을, 여당은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문제를 각각 물고 늘어지며 공방을 반복했다. 대검찰청, 법무부와 서울고검의 법사위 국감에서는 새누리당 김 대표 사위의 마약사건 축소수사 의혹과 박 시장 아들의 병역 문제가 거론되면서 여야는 소모적 신경전을 이어갔다.

서울시 감사에 나선 국토위에서 여당은 박 시장을 향해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박 시장을 향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난타에 박 시장 역시 “정치적 음해“, “호통 치지 말라“는 등 반격을 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이미 국가기관에서 6번에 걸쳐 혐의가 없다고 밝혀놓은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런 문제제기는 정치적인 음해“라고 반박했다.

경남 창원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상남도 국정감사에서는 홍준표 경남지사와 야

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 자료 제출 문제로 설전이 벌어져 파행을 거듭하는 바람에 경상남도의 위임사무 주요 이슈는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

5. 호통보다는 진지한 연구·분석을 통해 정책국감 절실

국정감사장은 기관장을 면박주거나 호통치는 장소가 아니다. 의원들도 국정 이슈에 대한 진지한 대안을 도출하는 데에 앞장 서야 한다. 매년 똑같은 쟁점을 가지고 호통과 질책만을 되풀이하는 것은 국력낭비이다.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가 지난 8년간(제18대 국회와 제19대 국회) 국정감사의 시정처리요구사항 현황에 대해 분석을 해 본 결과, 전체 시정처리요구사항 중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5개 상임위원회에서 매년 869건이나 고질적으로 시정처리 요구¹⁾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 제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1) 비례대표 의원은 전문성을 살리는 위원회에 보임해야

각 당마다 직능을 대표하여 선출한 비례대표의원들이 국정감사를 전문적으로 이끌어야 함에도 비례대표의 1/3이 자신의 전문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상임위에 배치되어 있어 비례대표의 공천과 전문성 활용 등에 있어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제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2) 국감 진행은 파행 없이 다수결원칙으로 갈등해소

증인채택 등 국정감사 진행이 원활하지 못하여 파행이 빚어지거나, 국정감사의 맥을 잃은 경우도 제19대 국회 내내 여전하였다. 제20대 국회에서는 증인채택 등 의사진행에 있어서, 국감 보이콧이나 인위적인 파행이 아닌 민주주의의 대원칙에 입각한 다수결 원칙으로 해결하는 의사진행 풍토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3) 증인채택 논란 종식을 위한 대안 마련해야

더 나아가 9월 17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등 일반증인 20명, 참고인 8명이 출석하여 국정감사 시간 절반이상을 증인심문에 할애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정상적인 국정감사는 하지 못하였다. 9월 21일 보건복지위 국정감사는 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해 국감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거의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증인채택을 과도

1)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 ① 국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② 국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개정 2011.5.19>

③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회는 제3항의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게 하여 국감도중 증인신문을 하느라 피감기관에 대한 심도 있는 국정감사를 실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증인신문기일 마련, 증인신청 실명제 등 효율적인 국정감사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4) 외교통일위원회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지양하여 생산적으로

외교통일위원회의 재외공관 국정감사는 해외 현지에서 하여 국민의 신속한 알권리 확보가 어렵고, 국정감사의 효과도 반감되므로,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필수불가결한 재외공관에 대해서만 현지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나머지는 화상 국정감사 등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외통위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10억7000만원의 국감 예산을 사용했다. 이는 전체 국감 예산(37억2700만원)의 28.7%에 달한다. 감사위원수가 23명으로 같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보다 6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2015년에도 외통위는 9월13일부터 22일까지 3개 반으로 나눠 22개 공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는데 실제 감사시간은 34시간45분에 불과했다. 그러나 기관 방문을 위해 들인 비행시간은 100시간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4~5시간을 날아가서 1시간 남짓 감사를 실시한 셈이다. 제20대 국회에서는 국정감사 공개원칙에 따라 재외공관 국감에 대한 인터넷 생중계가 필요하며, 문제가 있는 재외공관을 선별해 방문하거나 화상 국감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5)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부실, 지연 근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서 서류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주무장관에게 해명요구,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요구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거부, 부실, 지연이 여전하다.

매년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자료제출에 대한 거부나 부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없이 넘어가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국정감사를 제대로 하고자 하는 국회의원들의 의지를 의심하게 만든다. 피감기관의 입장에서는 강제력을 동원하기 전까지는 무슨 핑계를 대든지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 바, 입법권자인 국회의원이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6) 적절한 피감기관 선정으로 ‘수박겉핥기’ 국감 종식

과다한 피감기관 선정으로 인해 일반 증인은 물론 피감기관에 대해 질의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았고, 서면으로 대체하는 등으로 수박겉핥기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제20대 국회에서는 피감기관 선정과정에서부터 신중하고, 저인망식 피감기관 선정보다는 문제가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집중과 선택의 관점에서 피감기관을 선정해 효과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 2015년도 국정감사위원 활동평가

1. 국정감사 모범의원

(1) 선정근거와 연혁

지난 제15대 국회 이전에는 정당의 핵심당직자, 국회부의장, 대선후보자 등은 정치 활동, 당직 등을 병자하여 국민의 대표로서 입법기능 재정통제기능 등 국회 4대 기능을 집약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국정감사에 대부분 불참(不參) 또는 매우 소홀하였으나, 우리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구체적인 의정감시와 강직 엄정한 의정평가의 신인도가 높아져 영향력(총선 후보의 공천기준 등)이 커지면서 이 같은 관행이 점차 감소하였다.

제17대 국회이후로는 국감을 등한히 하는 관행이 불식되도록, 매년 국회직, 주요당직, 다선의원 등을 대상으로, 모범의원상을 신설하고, 매년 선정·시상한 바, 교섭단체 정당 당직자의 참여도가 꾸준히 높아져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등의 놀라운 효과가 발휘되었다.

제18대에서도 19대 국회에서도 국회 부의장을 비롯하여 교섭단체 당직자, 다선의원들의 국감참여도가 여타 의원들의 모범이 되고 있으므로, 특히 국감NGO모니터단에서는 국정감사의 맥을 짚어 정책국감을 제대로 하고자 하는 의원들을 국감우수의원과 다른 없는 예우로서 국정감사 모범의원으로 선정하고 있다.

(2) 선정결과와 선정사유를 약술함 (국회직, 가나다 순)

○ 정갑윤 국회부의장 (법제사법위원회)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고, 여당의 국회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으면서도 이번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결석 없이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여 상법개정안, 형법 배임죄 조항 개정 등 입법활동과 직접 연관되는 피감기관마다의 정책질의와 예산누수문제 등을 심도있게 조명해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서 개인회생·파산신고센터의 애로 사항에 대해 조명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경영권 방어수단 등 상법개정안과의 관계성, 경제살리기 차원에서의 중소기업·중견·벤처기업에 대한 방어조치 등을 심도 있게 조명하고, 형법 제355조2항 횡령·배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배임죄의 불명확성, 경영판단원칙 등 배임죄 관련 판례 등 문제를 조명하였고, 존 스쿨제도와 예산낭비에 대해 조명했다.

헌법재판소 등 국정감사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창립기념행사에서 나눔과 기부를 한 것에

대해 긍정평가하면서 헌법소원제도의 남용문제를 지적하면서 국선대리인 선임문제, 심사 기일 지연문제 등에 대해 조명했다.

감사원 등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부실, 지연문제를 질타하고, 감사원 직원들의 일탈행위, 감사혁신추진위원회 위원 구성문제, 징계위원회 문제, 감사원의 전문직 군제현황, 직원 이직률 문제, 교육문제 등을 조명했으며, 특별감찰관 국정감사에서는 특별감찰관의 역할과 조직에 대해 점검하고, 법제처의 법률규정 방식 문제 등을 조명하였다.

군사법원 등 국정감사에서는 우리나라 군인에 대한 비하 광고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방위사업 비리 문제, 영관급이상의 성범죄 문제 등을 조명했고, 단기 법무관의 임관시기 문제로 인한 공백문제 해결대책과 장기군법문관제도 전환을 주문했다.

검찰업무 관련 국정감사에서는 검사 해외훈련 교육제도와 관련하여 의무 복무기관을 채우지 않은 문제점을 조명하고, 비용낭비 문제를 지적했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재원문제, 지식재산 분야 전문검사제도 문제와 양성문제 등을 조명했고, 검찰시민위원회 운영과 검찰 기소 독점 문제에 대해 조명하였다.

법원업무 관련 국정감사에서는 임의적 국선변호인제도와 혈세낭비문제, 법원 홈페이지 관리 및 홈페이지 내용 구성, 양식제공의 차이점 등 세밀한 부분까지 점검하고, 조정센터의 역할과 성과 문제를 조명하고, 범죄피해자구조금 구상권 회수 문제,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인한 형사보상금 지출문제, 퇴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문제와 전관예우 방지 문제, 판사 1호인 박상진 의사에 대한 훈격과 예우문제, 양심적 병역거부자 재판의 양형과 ‘양심적’이란 표현 문제에 대해 지적하였다는 평가이다.

○ 우윤근 국회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전남 광양·구례)은 법제사법위원장, 제1야당의 원내대표 등을 역임한 경륜과 9번 법사위 국정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헌법적 소신이 담긴 중량감 있는 정책질의를 하여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서는 정치권력의 구조적인 문제, 법질서 확립을 위한 검찰의 법집행 공정성 문제와 신뢰도 문제를 집중 거론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 검찰인사의 지역편중과 검찰인사위원회 제도, 사정수사 등의 문제점을 조명하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대통령의 입장을 점검했다. 소수자 배려적 차원에서 출소자에 대해서 생계를 위한 예산 활용 등도 점검했다.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헌법재판관 겸임을 제안하고, 헌법재판연구원의 처우 개선문제, 임기연장, 청소시설 용역근로자 기본권 보장, 국선대리인의 구두변론 활성화 등을 조명했다.

감사원 등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의 독립성과 제도상의 문제점, 권력구조 개편 문제 등을 조명하였고, 사무총장의 임명과정 절차와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감사위원들의

정치활동 금지와 선거운동 관련 지적을 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운영감사제도 등도 조명했으며, 성예방 관련 교육 참여율 저조 문제 등 질의했다.

특별감찰관 국정감사에서는 권력실세, 소위 청와대 권력에 대한 상시감찰의 필요성과 특별감찰관제도의 미비점을 점검했으며, 법제처 국감에서는 위임입법 논란과 관련해서 법제처의 가치중립적 법해석과 법제처 경제국장의 수뢰문제에 대해 점검했다.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사이버사령부의 정치적 중립성, 성범죄, 윤 일병을 비롯한 사병들의 사건사고, 방산비리 등 군사기 저하 문제 등을 집중 조명하고, 평시 군사법원 폐지 등 군사법원 개혁문제와 독립성문제를 점검했다.

검찰관련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에 대한 국민신뢰도 저조문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본질적인 구조적인 문제, 수사 중 자살, 출국금지 등 인권침해 등 대한민국의 사정수사와 특수수사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법원관련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 법원 불신문제, 정치적 중립 문제, 법관의 행정부 행(行)문제, 유전무죄, 무전유죄 문제를 양건 전 감사원장의 책과 ‘절망의 재판소’ (세기 히로시 지음) 등을 인용하여 문제제기를 하였고, 법정이자율 적용에 대한 합리적 기준문제, 저작권법 위반 재판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고등부장 승진제도문제, 화학적 거제와 관련해서 약물치료명령 사건의 편차문제와 양형문제 등을 조명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과 관련해서 법관들의 기본권, 헌법에 관한 관심 제고를 주문했다. 대법원 형사공탁 특례 문제 등을 조명하였다.

○ 이주영 국회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이주영 의원(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은 4선 중진 의원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하였고, 국회사법제도개혁특위위원장,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훌륭한 리더십을 보여 주었는데, 이번 외교통위의 국정감사에서 해외공관까지 하루도 결석함이 없이 외교 분야와 통일 분야에 대해 정책질의를 하여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외교 분야 국정감사에서는 우리나라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부부의 날’ 국제화 문제에 대해 일종의 문화상품으로 부부의 날을 한류문화로써 세계에 진출시켜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제안을 하였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정책 특히 대중국 외교정책의 성과에 대해 조명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관련해서 남북철도 연결문제, 한중 열차페리 문제 등에 다각적 방안을 주문하고, 이니셔티브 구상이 이루어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조했다. 일본의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를 할 때 일본과의 합의를 한 것에 대해 점검하고, 일본의 합의 무시발언에 대해 대응을 주문했고, OECD DAC에 가입할 당시에 약속했던 것이 GNI 대비 0.25%까지 ODA 자금을 확보해서 집행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TPP 협상과 관련하여 가입하는 지 여부, 칠레 페루와 FTA 체결 이후 그 외의 중남미 국가들은 아직 FTA가 잘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이유,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에 대한

외교적 대응에 대해 점검했다. 유엔 관련 홈페이지도 보면, UN HCR 홈페이지에 ‘Sea of Japan’ 만, UN HABITAT 홈페이지 지도에 보면 한글로 되어 있는데도 ‘일본해’ 라고 표기되어 있다면서, 동해 표기에 관한 외교부의 노력을 주문했다.

통일분야 국정감사에서는 독일통일 시에 방송의 역할을 조명하면서 대북방송에 대한 전향적인 의식 전환 필요성과 북한방송의 자유롭게 청취 등 남북한 방송교류에 대해 다각적으로 조명했다. 북한이탈주민(탈북자)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취업교육, 의사고시 등 전문분야 자격 취득 문제 등을 조명하였다. 특히 국내 입국자 중의 한 2% 정도가 탈북자 보호대상에서 탈락이 되어 있는 문제점과 탈북자의 자살문제 등을 적절히 조명하였다.

통일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느끼지 못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국가가 공식적으로 집계하고 있는 통일비용액수와 통일비용에 대해 이해부족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되어야 하고, 독일의 경우에는 통일국가 건설을 위해 계속 투자하고 있다고 강조했고, 제대로 된 통일부의 통일에 대한 비용대비 편익분석을 주문했다.

○ 장운석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장운석 의원(경북 영주시)은 예결특위 위원장 등의 중임을 수행했고, 헌정대상 등을 수상하는 등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하였는바, 이번 산업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의원님(끝날 때 위원장은 그때까지 있었던 의원의 이름을 호명하여 회의록에 남김)”으로 감사장에 좌정하여 책임감 있게 성실하고도 치밀한 국정감사를 수행하는 모범을 보여 주었다는 평가이다.

산업통상위 국정감사에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추진속도, 추진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환경상품협정 추진과 관련하여 대응책을 주문하면서 베어링산업의 실정과 어려움에 대해 조명하면서 정부의 R&D에 관한 특단의 투자 또는 지원방안을 주문했다.

중소기업청 등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책을 주문하고,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과 임대료 문제를 적절히 조명하였으며, 나들가게 육성지원 사업의 난맥상도 점검했다. 신용보증재단의 재보증 실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수출 인큐베이터 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 상인대학 실태 등을 점검하면서 대책을 주문했다.

특허청 등 국정감사에서는 ‘특허 출원중’ 용어 개선 문제, 특허청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PRIS) 이용실태 및 만족도 저조 문제, 발명장려문화조성사업 문제, 특허청 산하기관 직원 비리 급증문제 등을 조명했다. 지식재산 거래시장 활성화 IP 스타기업 육성사업, 지식재산경영 인증제도에 대해 점검했다.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관련 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송전탑 건설과 첩탑디자인 문제 등을 정책제안하고, 한전 공사 입찰 관련 부정비리, 국가기간산업의 민간위탁문제 등을 점

검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등 국정감사에서는 한수원 정보보호 보안수준 문제, 직무수행 능력(JQC, Job Qualification Card) 제도, 원전해체비용 충당금 운용관리, 원전 안전문제를 적절히 조명했고, 온실가스 감축 문제 등을 조명했다.

한국가스공사 등 국정감사에서는 준비된 영상으로 에너지공단의 시료처리 문제점을 질타하고, 강원랜드 중장기 경영전략에 대해 점검했다. 광해관리공단의 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주주배당률 문제,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 등에 대해 점검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국정감사에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안전사고문제와 보일러 설치 기준문제를 지적하였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문제, 친환경 생태산업단지의 성과에 대해 점검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국정감사에서는 바이코리아 사이트 운영과 실제 계약 성사 비율문제, KOTRA의 중고 기계 수출 활성화사업, 해외의 미회수 채권 확보문제에 대해 점검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중소기업 신소재 사업화 가능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테스트베드 사업문제를 점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는 전력산업 발전방안의 중복 용역발주문제와 예산낭비 문제, 코리아 그랜드세일의 효과 문제, 송주법의 주변지역 보상 합리화, 부생연료유 1호의 황 함량 문제에 대해 조명하였다.

중소기업청·특허청 종합감사에서는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중소기업청 컨설팅 사업, 중소기업 특성화고 지원사업,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전기·가스 안전시설 불량 문제점 지적 등에 세심하고 정책적인 국정감사를 전개했다는 평이다.

○ 주승용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시울)은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역임한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헌정대상 등을 수상하는 등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왔는데, 이번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의 최고위원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으면서도 정책방안 제시 등 탁월한 국정감사 면모를 보여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는 7차 전력수급계획에 대해서 조명하면서, 환경부와 산업부가 같은 자료로 분석을 했음에도 차이가 나는 문제점을 지적했고, 원전 2기 추가신설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제기하면서 10기 정도 감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했다.

한중 FTA 비준동의안과 관련해서 농업과 어업, 수산업 분야에 예상피해와 대책을 주문했고,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추진속도가 느린 것에 대해 지적하였다.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사업조정제도 강화에 관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골목상권 보호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으며, 정부 정책의 명칭부터 신중하게 정하여야 한다면서 전통시장 활성화와 온누리상품권의 정책적 난맥상을 점

검하고, 전통시장의 소방화재와 피해액에 증가에 대해 점검하고, 중소기업의 수도권 밀집 문제를 조명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 지원과 관련해서 중소기업의 기술인력을 빼가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교육훈련분담금 부과현황을 점검했다.

특허청 국정감사에서는 변리사 의무연수제도 운영실태와 관련하여 변호사 출신의 변리사 교육저조문제를 지적하고, 특허청 발주 용역의 특정 기관 편중 문제를 지적했다.

한전 등 국정감사에서는 본사 매각과 당기순이익 발생 등에 대해 조명하고, 지역인재 채용의 활성화와 전선 지중화 사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조명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등 국정감사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점검하였고, 무상 지원 문제를 질타했다. 우드칩 국내산 개발 실태를 조명했고, 원전부품의 위조품·변조품 문제와 비리 등을 질타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등 국정감사에서는 자원의료문제를 지적하고, 하베스트 인수 협상 등에 대한 한국석유공사의 책임문제 등을 집중질의했으며, 광해관리공단 출자법인의 적자문제를 조명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국정감사에서는 가로등·신호등 안전점검 문제, LPG 용기 노후화 문제와 불량용기 유통방지 이력관리 시스템, 가짜유류 문제에 대해 조명하였고, KOTRA 등 국정감사에서는 우리나라가 30개 국가로부터 169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책을 주문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프로젝트 선정 과정의 외압문제 등을 조명했으며, 중국산 에스컬레이터로 인한 피해 문제 등을 점검했다.

종합감사에서는 ‘실체 없는 스마트그리드 사업, 계속해야 하나’라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공기업 직원들의 항공 비즈니스석 이용문제와 여비규정, 석유비축기지의 주변마을 지원사업, 군산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 민원 문제 등을 조명했다. 또한 중기청 감사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 여론조사 결과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질의를 했다는 평가이다.

○ 천정배 국회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은 법무부장관과 원내대표 등 정부와 당의 요직을 역임한 바 있는 5선 중진의원으로서, 신당 창당준비 등의 바쁜 와중에서도 이번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 번도 결석 없이 성실하게 참여하였고, 법령미비, 예산낭비 등을 적절히 점검하면서 정책국감을 전개하는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국토교통부 등 국정감사에서는 경원선 철도에 남측구간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정책질의를 하였고, 남북 합의 없는 일방적인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제철도 협력기구 OSJD 가입 좌절의 문제점과 운전기사의 예화를 통해 국토부가 구축하고 있는 전국 택시 통합콜센터 1333사업의 난맥상을 점검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국정감사에서는 국내 항공 수요와 해외 직항 수요의 한계성과 환승객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외항사 유치와 슬롯(slot) 배려에 대책을 점검했다. 저

가항공 시장에 대한 대책 LCC 터미널 건설과 시설 중 일부를 LCC 전용시설로 활용할 방안 등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KTX 개통에 따른 지역공항 승객의 감소 문제, 노선 조정문제 등을 점검했다. 인천공항 3단계 건설사업 제2여객터미널 공사현장과 제2합동청사 공사현장과 또 활주로 예정지가 불소의 오염기준치 초과 문제와 대응책이 미흡문제를 질타했다.

한국감정원 등 국정감사에서는 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해 연구비 비리에 대한 제한 조치 등에 대해 점검하고, 연구비의 부적절한 집행 환수 문제 등을 지적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 임직원의 국외출장경비 사용의 증빙자료에 대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즉시 시정답변을 받아냈다.

한국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는 고속도로상의 장애물로 인한 사고나 그 피해현황에 대해 점검하면서 고속도로 위의 장애물이나 낙하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운전자에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면서 시정방안과 도로 위의 장애물 신속 제거대책을 주문했다. 전기자동차 활성화 관련 전기차 충전소의 부족 문제에 대해 개선대책, 177개소 전국 휴게소의 장애인 안내시설 설치 저조문제에 대해서 점검했다. 교통안전공단에 대해 도로교통공단과의 업무 중복문제와 업무분리 기준의 타당성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출장검사소 폐지 축소 문제를 점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관리공단(주) 국정감사에서는 부하 성추행 사건 등 성범죄 척결 문제, 장애인 영구임대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시설문제 등 일반분양아파트하고 임대아파트 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의 장기수선계획 관리 허술 문제도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등 종합감사에서는 철도에 대한 투자 부족문제를 지적하고, 안전성과 환경친화적 편익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2차 국가철도망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점검하는 등 열정적인 국정감사를 전개했다는 평이다.

2. 우수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장

(1) 평가기준 및 방법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회 평가에서는

1) 먼저 **내용적 측면**으로 ① 우리 모니터단이 17년 동안 사용해 온 국민의 의혹사항에 대하여 규명이 잘 이루어졌는지 여부, ② 주요현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질의가 많이 나왔는지 여부, ③ 피감기관의 예산낭비사태가 잘 지적되었는지 여부, ④ 피감기관의 불법·부당한 업무방법에 대한 시정조치요구가 많았는지 여부, ⑤ 잘못된 정책과 그 집행에 대한 집중 추궁이 있었는지 여부, ⑥ 잘못된 법과 제도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이 많았는지 여부, ⑦ 국정을 감사함에 있어서 국가적·사회적 이슈를 탁월하게 발굴·지적하는 의원들이 많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2) **절차적 측면**으로 ① 철저한 국감공개원칙의 준수 ② 전략적 투쟁의 장으로 비화될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간 양보를 통해 정책감사를 전개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과행을 예방·조기 수습한 점) ③ 의원 전원이 출석하였는지 여부, 국감진행 중 잦은 이석이 있었는지 여부(감점), ④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여부, ⑤ 약속된 국정감사 시간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 ⑥ 불필요한 정회 등이 많았는지 여부(감점) 등과,

3) **아울러** ① 국감NGO모니터위원회에 대한 방청허가의 신속성과 방청 허가된 모니터 위원수가 적정했는지 여부, ② 시민단체 모니터석의 마련 여부, ③ 모니터석이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 여부 등 모니터 배려사항 등도 고려하였고

4) 또한 국정감사에서 위원장의 리더십도 국정감사 성패의 주요 관건으로 평가하여 선정하였다.

(2) 선정결과 및 사유(抄) (국회법 제37조에 의한 순)

○ 이상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법제사법위원회는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나타나는 부실과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정갑윤 국회부의장, 이병석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김재경 예결특위 위원장,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비롯해 감사위원의 100% 출석과 정책질의를 통해 모범적인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다는 평가이다.

상고법원과 그 설치의 과잉홍보 문제점 지적 등 이슈를 점검하고, 감사원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 정치적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와 재판, 헌법재판소 결정 지연 문제, 전관예우의 문제 등 사법제도와 운용, 관행의 고질적 문제점에 대한 질타와 점검이 주질의, 보충질의, 추가질의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평가이다. 기소권을 남용한 검찰의 갑질 문제를 적절히 조명하고, 행정사건에서 거대한 국가공권력과 맞싸우는 개인(국민)의 권리 구제에 너무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점검도 있어 호평을 받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 마약투여 형량 문제,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 문제, 감사원 외부인사 사무총장 등용문제, 상고사건이 계류 중인 야당위원의 국감 참석 등 여야간의 입장차가 현저한 사안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들이 화합과 인내력을 발휘하고, 위원장의 노련한 회의진행으로 극단적인 과행을 면하였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10월 8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가 진행됨으로서, 제19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가 정착된 것도 긍정적인 평가로서, 제20대 국회에서도 종합국정감사는 반드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 홍문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와 달리 정책국정감사의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이며, 특히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1년간의 경과에 대한 평가, 포털사이트의 뉴스별 공정

성 등에 대해 적절히 조명하면서, 인터넷 명예훼손 게시글 문제, 유해 사이트 및 SNS 유해 게시 글에 대한 청소년 접근, 원자력 안전문제, 가계 통신비 인하 등 국민 불안 해소,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생활국감을 전개했다는 평가이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 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보완 방안, 국가 R&D 혁신을 위한 개선방안, 국가정보원 감청설비 도입과 관련한 논란 등 미래창조과학 부의 정책 에 대한 정책 조명이 있었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발언과 관련해서 야당 의원들과 피감기관간의 갈등도 있었으나, 상임위원장이 여당인 다른 상임위원회보다 국정감사 진행이 원활했던 점도 높 이 평가되었으며, 특히 종합국정감사에서 인터넷 화상 국정감사를 시도하여 호평을 받았다는 평가이다.

○ 김우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여야의원들이 합심전력으로 정책국정감사를 진행하여 한중FTA체결에 따른 소관분야 피해에 대해 정책점검과 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 제외해야 한다고 하는 등 농축산어민의 권익에 앞장섰으며, 농어촌 현실과 농어촌 대상 정책의 실태를 진단하고, 산림청, 농협 및 수협, 마사회 등의 방만경영과 모럴해저드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는 평가이다.

농림축산식품분야에서는 무역이득공유제 도입과 관련된 용역의 내용 및 과정의 적정성 문제, 쌀 과잉 공급 및 밥쌀용 쌀 수입 등에 따른 쌀값 하락에 대해 정부의 명확한 입장 및 대책 촉구, 정부가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한 한중 FTA 영향평가 및 대책 개선, 농정 예산 문제, 매년 반복돼 있는 가뭄피해에 대한 대책,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의 소비위축 문제, 사료담합 문제, 시장도매인 제도의 확대 도입 필요성 등 우리 농정 전반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제언이 있었다는 평가이다.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2014년도 세월호 참사 이후 여러 가지 안전대책이 논의되었음에도 다시 발생한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사고와 관련하여 선박 입출항 및 여객승선 관리 부실 문제, 선박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 그리고 선박 안전관리 체계가 해양수산부와 국민 안전처로 이원화됨에 따른 혼동 등 선박 안전관리 및 대책에 집중조명이 있었고, 예선업체의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적정 수급계획 마련 필요, 수협중앙회의 사업구조 및 조직 개편 방향, 연근해어업의 어업조정 필요, 세월호 미수습자의 배 보상 신청기간 연장 등 해양수산 정책 등에 대한 여러 문제점 제기와 정책제안이 있었다는 평가이다.

3.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명단 별첨함)

(1) 개요와 평가의 기본원칙

국정감사는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따라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원회 소관 피감기관의 국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및 정책심의에 반영하고,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제반자료 및 정보의 수집·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평가하는 기본원칙은 1) 국정감사 기간 및 그 직전직후의 국정감사와 관련된 내용만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2) 국정감사기간 중 2일 이상 결석한 의원과 형식상 출석했으나, 이석이 과다하여 사실상의 질의가 없었던 의원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2) 평가방법

- 01) 현장 모니터위원들의 추천 검토(BEST, WORST)
- 02) 국회 영상회의록 등을 통한 관련 정책질의와 질의의 적정성 검토
- 03) 국정감사모니터단의 자료 및 의원 개인 홈페이지의 국정감사 자료 분석
- 04) 국정감사요구자료·보도자료의 정책 검토
- 05) 국회공보 및 모니터 보고서의 출결·자리뜨기 등의 객관적 성실도 검토
- 06) 전문가에 의한 정책 평가 의견 조회
- 07) 국회의원실이 제공한 국감관련 자료와 자평(自評) 등 분석·확인
- 08) 언론에 보도된 국회의원 및 의원보좌진에의 설문조사 결과 등 의견 참조
- 09) 언론보도내용(단편적 평가라도)의 검토

(자세한 것은 지난 17년 동안 공개하고 있는 NGO모니터단의 국정감사 평가방법 참조)

(3) 중점 평가지표

- 10) 지난해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제대로 지적했는지 여부
- 11) 피감기관의 잘못된 법령이나 제도를 제대로 짚었는지 여부
- 12) 피감기관의 예산낭비 사례를 들거나 예산낭用に 대해 지적을 하였는지 여부
- 13) 실현가능한 합리적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는지 여부
- 14) 사실적인 현장조사(통계자료 및 설문조사 등)에 의해 얻어진 자료를 기준으로 정책질의를 하였는지 여부
- 15) 정책대안 중에 지역구나 소속 정당이익만을 위한 정책이 있었는지 여부(감점)
- 16) 정책대안 중 심포지엄 등 별도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대안이 있었는지 여부
- 17) 국회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정책자료, 주요정책·정책개선과제 활용 여부
- 18) 일문일답식(물고 그 자리에서 답하기)으로 엄정한 신문(질의)을 했는지 여부
- 19)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등 특화된 정책국감 이슈를 제기하였는지 여부
- 20)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등 인권보장을 위한 문제제기 및 대안제시가 있었는지 여부
- 21) 제도적 개선을 위한 법의 제정(개정)을 제안했는지 여부
- 22) 건전한 시민운동의 발전과 순기능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는지 여부

23) 국정감사장에 정시에 출석하였는지 여부

24) 의원이 과도하게 이석하여 자리를 비웠는지 여부 등(감점)

(자세한 지표는 17년 동안 공개하고 있는 NGO모니터단의 국정감사 평가지표 참조)

(4)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원칙

- 25) ① 국감기간 중 2일 이상 결석한 의원은 평가대상에서 우선 제외한후에,
 ② 형식상 출석은 했으나 사실상 질의하지 아니한 의원과,
 ③ 너무 이석이 잦거나 장시간 이석함으로써 타 의원의 질의내용과 피감기관의 답변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타의원과 똑같은 질의만 하는 의원은 국감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났다고 보고 평가는 하되 감점대상이며,
 ④ 그런 연후에는 질의 내용의 정성평가를 하여 선정함.
- 26) 평가결과와 성실성이 비슷할 때는 다선의원을 우선하여 선정함.
- 27) 평가결과와 선수(選數)가 같을 경우에는 국감NGO모니터단에 대한 협조여부와 평소 의정활동 (법률연맹이 확보하고 있는 국회의원 전원의 13항목별 평가자료 의거)을 참작함.

■ 2015년(19-4)국정감사의 쟁점

== 여야 의원간 또는 감사위원회와 피감기관 간 주장내용 한눈에 보기 ==

(1) 메르스 사태 원인과 재발방지대책 관련

9월 10일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

여당의원	야당의원
대형병원 응급실에서의 환자쏠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장의 차관급으로 격상해야 한다.	메르스 사태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국가 방역체제 개편안이 졸속추진되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야 한다.

(2) 포털사이트 뉴스의 공정성 문제

2015년 9월 10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 국정감사

여당의원	야당의원
포털이 막대한 영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뉴스를 선정하는 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공정성이 부족하다. 포털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포털 뉴스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언론을 억압하는 일이다. 포털 사이트를 비롯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한다. 공정성과 공익성 문제는 언론은 물론 언론의 역할을 하는 포털도 끊임없이 노력할 사안이다.

(3) 정중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총선 필승 전배사

2015년 9월 10일 행정자치부 국정감사

여당의원	야당의원
장관의 발언이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뤄진 것이다. 정책 위주로 국감을 진행해야 한다.	장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렸다. 장관은 자진사퇴해야 한다. 국감에 불참하다.

(4) 정치인 수사 편향성 문제

2015년 09월 10일 법무부 등 국정감사

여당의원	야당의원
야권 정치인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미온적이다. 한명숙 전 총리 등 특정 야권 정치인에 대한 변론의 장으로 운영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을 정치판결이라고 매도해선 안 된다.	검찰의 정치인 수사가 야당과 과거 정권, 그리고 청와대에 밀보인 사람에게만 겨냥돼 있고 현 정권과 관련된 인사들에게는 봐주기 식 수사를 하고 있다. 사건 무마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의 박근혜 대통령의 이중사촌 형부 비리는 검찰이 수년간 은폐했다.
피감기관 김현웅 법무부장관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검찰을 지도 감독하겠다.

(5) 정부의 노동개혁 관련 담화문

2015년09월 11일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여당의원	야당의원
노동개혁이 시급한 문제인 만큼 정부는 나름대로의 정책 대안을 제시한 것뿐이다. 문제가 있다면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면 될 일이다.	정부가 담화를 통해 임금피크제와 해고기준 등을 노동개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태이다.
피감기관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노동개혁이 시급한 상황에서 노사정위원회의 협의만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노동개혁 입법의 절실함과 시급성을 촉구하기 위한 담화였다

(6) 전시대응책인 작계계획 5015 보고

2015년 9월 11일 합동참모본부 등 국정감사

여당의원	야당의원
-	전시 대응책인 작전계획 5015를 보고할 것을 요구하다.
피감기관 최윤희 합참의장	기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

* 일시 정회 초래

(7) 총기 사고 관련 대응책

2015년 9월 14일 안전행정위, 경찰청 국정감사

여당의원	야당의원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경찰관이 실탄이 지급되는 치안현장에 배치돼 있는 것은 우발적 총기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	구과발 검문소 총기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무기탄약관리규칙과 검문소운영규칙 등을 어겼다.

정신질환이 있는 경찰관에 대해서는 근무지를 재배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자 처벌과 규칙 이행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피감기관 강신명 경찰청장	정신적 문제 등 부적격 경찰관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구과발 총기 사고와 관련해서는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함께 총기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

(8)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년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입직원 채용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2015. 10. 14. 산업위의 중소기업청 등 국정감사

여당의원	야당의원
인사청탁 증거가 없다며 이를 기정사실화해선 안 된다.	최 부총리가 자신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인턴을 신입직원으로 합격시켜 달라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탁한 것 아닌가.

(9) 창조경제혁신센터 성과

2015년 10월 1일. 미방위의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

여당의원	야당의원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등 타 기관과의 중복사업을 해소하는 등 운영을 합리화 할 것이다.	21조원이라는 투입예산에 비해 성과가 미미하다.

(10) ‘이완수 사무총장 임명’의 적절성

2015년 09월 14일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

여당의원	야당의원
검찰 출신의 외부 인사가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임명됐다고 해서 감사원의 독립성이 침해받는 것은 아니다. 검찰 재직 당시 이 사무총장이 부정부패 척결에 힘써왔고, 감사원 본연의 업무 또한 부정부패 척결임을 강조하면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무리가 없다.	검찰 출신의 이완수 사무총장이 황교안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며, 현 정권이 감사원을 통제하기 위해 의도한 인사이다. 삼성 측 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이 사무총장이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삼성서울병원 감사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11) 노사정이 10월 13일 잠정 합의한 노동시장 개혁안

2015년 09월 14일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여당의원	야당의원
노동시장 개혁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내년에 국가 채무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게 된다고 우려하고, 악화된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년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노동시장의 고용불안을 촉진 시킬 것이다. 노동자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10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민생파탄을 불러올 것이다.
피감기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노사정 대타협의 일반해고 조항은 근무 불량자를 대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12)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 과다 등 세금문제

2015년 9월 15일 기획재정부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여당의원	야당의원
법인세와 사내 유보금은 별개의 문제이다. 복지정책의 구조조정이 우선이다.	법인세 인상이 해법이다.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세율을 올려야 한다.

(13) 노사정 대타협 평가

2015년 09월 15일 환노위, 노사정위원회 국정감사

여당의원	야당의원
노사정위원회가 노동계와 사용자, 정부의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해 이번 대타협을 이루게 된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합의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	대타협을 사회적 합의로 인정할 수 없다. 노사정 합의 결렬로 사퇴했던 노사정위원장이 재신임되기 전까지 관용차를 무단이용하고 사례금을 수령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14) 안전사고 위험문제

2015년 9월 17일 안전행정위,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여당의원	야당의원
서울시가 석촌호수의 수위저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제2 롯데월드 건설이 그 원인이며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하다.	1~4호선 지하철역의 주요 시설 설비가 노후화돼 대형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고, 9호선의 경우에는 출근 시간대 급행열차가 혼잡해 안전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5) 한국은행의 독립성 문제

2015년 09월 17일 기획재정부의 한국은행 국정감사

여당의원	야당의원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세계 각국의 정부가 중앙은행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은 총재는 정부와의 소통을 꺼려서는 안 될 것이다. 대한민국 중앙은행의 수장으로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전후로 경제 철학과 정책이 달라지는 등 한은이 정부 정책을 따라가고 있다며, 한은의 독립성 훼손 문제를 제기하다.

(16) 서울시의 '서울역 7017 프로젝트'

2015년 9월 17일 안전행정위,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여당의원	야당의원
프로젝트를 시행하게 되면 서울역 주변의 교통이 혼잡해져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올해 11월에 착공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하다.	고가도로가 준공된 지 45년이 지나 안전진단에서도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D등급을 받은 만큼, 조속한 프로젝트 시행이 필요하다.

(17)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선거개입논란

2015년 09월 18일 안전행정위, 행정자치부 추가 국정감사

여당의원		야당의원
정 장관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중앙선관위의 판단에도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지난번 국감 파행에 대한 야당의 사과를 요구한다.		선관위의 판단은 인정할 수 없다. 지난 국감 파행의 근본 원인은 정종섭 장관의 부적절한 처신이다.
피감기관 정종섭 장관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사과하며, 선거와 관련한 법령을 엄중히 준수하겠다.

(18) 강원도 양양군의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문제

2015년 9월 18일 환경노동위원회의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에 대한 국감

여당의원		야당의원
		케이블카 설치 지역이 천연기념물인 산양 번식지라며 사업 반려를 해야 한다.
피감기관 국립공원관리공단	양양군과 함께 별도의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	

(19) 메르스 국감 증인 채택 논란

여당의원	야당의원
증인 채택 문제로 국감이 공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메르스 사태에 대한 종합적인 보완책 점검을 위해 국감을 원만히 진행해야 한다.	청와대의 최원영 전 고용복지수석과 김진수 비서관이 메르스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핵심 증인이라며, 이들의 출석 없이는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

* 국정감사 중단

(20)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9월 22일 복지위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여당의원		야당의원
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보험료 부과와 관련한 개편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여야정과 전문가 단체 등이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 나가는 방안을 제안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진전이 없는 것은 이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정부가 부과체계 개편 발표 시기를 확정해야 한다.
피감기관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마지막 시뮬레이션 과정에 있다면서, 완성단계인 만큼 곧 발표가 가능할 것이다.	

**(21)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 마약 사건과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
법사위의 서울 고검 등에 대한 국감**

여당의원		야당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집중 거론하며 X-ray 등 새로운 증거자료들이 제기되는 만큼, 다시 수사를 해야 한다. 박 시장의 아들이 치과치료에 사용한 건강보험증 번호와 검찰에 제출된 요양급여 청구내역의 건강보험증 번호가 다르고, 공개검증 당일 날에는 개인병원에서 따로 X-ray를 찍는 등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으며 재수사를 촉구한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주사기 17개 가운데 12개에서 김 대표 사위의 DNA가 확인됐는데도 범죄 혐의에 포함시키지 않는 등 사건을 축소하려했다며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재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피감기관 박성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박민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장	현재 법원에서 재판중인 사건으로 증거에 대한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검증 결과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입증되면 수사를 하겠다. 김 대표 사위의 자택에서 발견된 주사기에서 DNA를 확인했고 현재 수사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단서가 나오는 대로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	

(22)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 거취 문제

10월 2일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투자공사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

여당의원		야당의원
안 사장 등 한국투자공사 임원들이 잦은 해외출장과 전임자보다 훨씬 많은 출장비 지출, 그리고 출장에 불필요한 관광일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며 방만 경영을 질타하다.		한국투자공사 안홍철 사장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등 논란을 일으킨 점을 지적하며, 사퇴 등 거취문제를 확인하다.
피감기관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도 사퇴요청을 받았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으로 하는 것을 보고 판단해달라.	

(23)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의 정치적 편향성

10월 2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국감

여당의원		야당의원
-		고 이사장의 과거 문제인 후보에 대한 발언을 거론하는 등 극단적인 정치적 이념과 편향성을 지녔다며 방문진 이사장으로서 부적절한 인물이라고 비판
피감기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새정치민주연합 문제인 대표와 한명숙 전 의원은 사법부 전체를 부정했다	

(24) 김무성 대표 사위 마약사건 논란

2015년 10월 6일 대검찰청 국정감사

여당의원		야당의원
김 대표의 이름이 거론됐는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맞서는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한 철저한 수사도 촉구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위 마약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씨가 김 대표의 예비사위임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철저히 수사하라.
피감기관 김진태 검찰총장	수사 단계에서는 이 씨와 김 대표와의 관계를 알지 못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이러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수사를 잘 지휘하겠다.	

(25) 상고심 사건이 계류 중인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의 국정감사 참여 여부

2015년 10월 7일 법사위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감.

여당의원	야당의원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국감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법 조항에 명시돼 있다며,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재판 중인 박 의원은 오늘 대법원 국감에 참여해선 안 된다.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제척은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사안에 한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해당 사건에 대한 질의를 하지 않는 한 박 의원의 국감 참여는 문제가 없다.

(26)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2015년 10월 8일 교육부에 대한 교문위 종합국감

여당의원	야당의원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올바른 미래세대 교육을 위한 것이라면서, 반대 여론이 많다는 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친일과 유신 독재를 미화하려는 의도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대한 교육부의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라.

(27)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는 법무부 공문서 논란

210월 8일 법사위의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

여당의원	야당의원
해당 문서에 문제가 없다고 맞서는 한편, 대법원의 유죄 확정으로 수감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추정금 8억 8천만 원의 환수를 촉구한다.	박 대통령이 법무부를 통해 검찰에 대한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리고 있다.

(28) ‘역사교과서 국정화’

10월 23일 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 등 국정감사

여당의원	야당의원
국정교과서의 필요성 강조하며, 아직 한 페이지도 쓰여 지지 않은 국정교과서를 놓고 친일과 독재 미화라는 야당의 주장은 지나친 억측이다.	정부가 절차를 어겨가며 국정교과서 추진을 위한 예산 44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했다고 지적하고, 국정화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다.
피감기관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관계당국의 협의와 절차를 거쳐 예비비를 편성한 것으로 안다면서, 교육부가 편향되지 않은 올바른 교과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 청와대가 교육부 국정교과서 추진에 직접 지침을 내린 적이 없다.

■ 2015년(19-4)국정감사위원 홈페이지 활용도

국정감사자료 홈페이지 등 온라인게시 50%에 불과
환경노동위원회 감사위원은 68.8% 게시, 외교통일위는 17.4%에 불과

국회 홈페이지 국회의원 현황 중에 안내된 국회의원 홈페이지(블로그 등 포함)에 국정감사 자료(보도자료나 질의자료, 동영상 등 활동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한 자료, 단순 일정이나 보도된 언론기사는 제외)가 있는 지를 확인해 본 결과, 국회의장을 제외한 감사위원 297명 중 148명으로 전체 감사위원 중 49.8%만이 국정감사 활동내역을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유권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교섭단체별로는 새누리당이 60명으로 전체 159명의 감사위원 중에서 37.7%만이 올려놓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82명으로 전체 감사위원 129명 중 63.6%가 올려놓았다.

비교섭단체는 6명의 감사위원이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시하였다.(참고로, 조사 중 홈페이지가 있으나 연결이 안된 경우, 페이스북 등 가입을 해야 되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했음)

위원회별로는 환경노동위원회가 16명의 감사위원중 11명이 올려놓아 68.8%의 게시율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기획재정위원회가 65.4%, 다음은 국토교통위원회가 61.3%로 높았다. 가장 게시율이 저조한 위원회는 외교통일위원회로 23명의 감사위원 중 4명만 국정감사활동내역을 올려놓고 있었으며, 안전행정위원회도 21명의 감사위원 중 8명만 국정감사활동내역을 게시하고 있었다.

〈국회의원 홈페이지 국정감사 활동 내역 게시현황〉

위원회	감사위원 수	홈페이지 자료게시한 의원 수	홈페이지게 시율	교섭단체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법제사법	16	8	50.0%	4	3
정무	24	13	54.2%	4	9
기획재정	26	17	65.4%	8	8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23	8	34.8%	2	6
교육문화체육관광	30	15	50.0%	8	6
외교통일	23	4	17.4%	1	3
국방	17	8	47.1%	4	4
안전행정	21	8	38.1%	4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19	9	47.4%	3	6
산업통상자원	30	18	60.0%	6	11
보건복지	21	10	47.6%	5	5
환경노동	16	11	68.8%	5	5
국토교통	31	19	61.3%	6	12
합계	297	148	49.8%	60	82

* 비교섭단체 의원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가 있어 전체통계와 교섭단체 의원수가 다른 경우가 있음

■ 2015년(19-4)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 거부시위 여전, 국가위임사무보다 단체장 관련 국감질의 집중

제19대 국회 4차년도 국정감사에서는 10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15회 국정감사가 실시되었다.

국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실시하는 국정감사는 국가의 위임사무와 보조금 등 예산 지원사업에 대하여 집행상 문제점을 밝혀내고 시정을 촉구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현안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견 제시 기회를 부여하며 건의사항 등을 청취함으로써 관련 내년도 예산이나 법률의 심사 시에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준비는 어렵지만 지방자치단체도 또한 국정감사를 통해 중앙정부에 직접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데, 이낙연 전남지사는 자처하여 업무보고를 직접 하였다.

전라북도가 13개 상임위원회 중 3개 상임위원회 국정감사를 받았으며, 서울시와 부산광역시도 각 2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았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지방자치단체 현안문제보다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문제가 많이 지적되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과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대해 집중되었다.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노조에서 지방 국정감사 반대시위가 있었으며,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기피 논란도 제기 되었다.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 현황〉

지방자치단체명	단체장	위원회 감사반	감사 일자	특징 및 내용 등
서울시	시장 박원순	안전행정위	09.17.목	시장 아들의 병역문제 시장의 메르스 대처관련 서울시 노노조의 국감장 시위
서울시		국토교통위	10.06.화	제2롯데월드 문제, 용산공원 문제
부산광역시	시장 서병수	국 토 교 통 위 2반	10.02.금	동남권 신공항 문제
		안 전 행 정 위 1반	10.05.월	부산국제영화제 분산 개최
대구광역시	시장 권영진	안 전 행 정 위 1반	09.21.월	철도노선 도심 지하화, 도시철도 1~3호선의 운영 및 안전상의 문제
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	안 전 행 정 위 2반	09.21.월	송영길 전 시장과 유정복 현 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규모, 시청사 건립 관련 연구용역, 민자로 추진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이관 문제 등
경기도	도지사 남경필	안 전 행 정 위 위원회	10.02.금	연정/ 관피아 문제
		국토교통위	10.05.월	전월세대책 주거안전 경기도청사

지방자치 단체명	단체장	위원회 감사반	감사 일자	특징 및 내용 등
전라북도	도지사 송하진	농 립 축 산 식 품 해 양 수 산 위원회	09.21.월	새만금호 수질문제와 뜨거운 감자인 새만금 특별행정구역 지정문제 친환경농업, 노후 저수지 문제 삼락농정과 해양수산 정책
		국 토 교 통 위 1반	10.02.금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 관련 1991년 착공식 이후 24년여가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사업추진이 부진한 새만금 사업
		안 전 행 정 위 2반	10.05.월	안전 전북'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민안전실 전문인력 확충 소방 헬기 교체 저화질 CCTV 개선 전북지역 소방서 확충 등
충청북도	도지사 이시종	안 전 행 정 위 지방1반	09.22.화	충북도 5년간 축제비용 987억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에 따른 대학교 이탈 등에 관해 질의 국감폐지시위
충청남도	도지사 안희정	안 전 행 정 위 지방2반	09.22.화	2년 연속 청렴도 꼴찌를 한 도에 대한 질타 내포신도시 개발지연문제
경상남도	도지사 홍준표	안전행정위 지방1반	10.06.화	오전 9시 30분 무상급식 관련 학부모 피켓 시위 홍준표 도지사의 수감 자세와 자료제출 문 제 성완중 리스트관련, 진주의료원 폐업과 서부 청사 개청, 무상급식 중단, al국 출장 중 골 프 등
전라남도	도지사 이낙연	안전행정위 지방2반	10.06.화	도지사가 직접 업무보고 전남도 최대 난제인 F1(코리아그랑프리)에 대한 질의, 무안공항문제

■ 2015년(19-4)국정감사의 개황

== 역대 최대 규모 국정감사, 하지만 성과는 미흡 ==

○ 2015년도 국정감사는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국감법’으로 함) 제2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국회는 9월 1일 제337회 정기국회 1차 본회의에서 ‘국회 일정을 고려하여’라는 면피성 이유로 ‘2015년도 국정감사는 정기회 중에 실시한다’는 2015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의안번호 1916679호)’을 의결하였으며, 제 19대 국회 4년 내내 국정감사 제2조 본문에 의한 국정감사는 실시되지 못하였다.

○ 2015년 8월 20일 새누리당(원내대표 원유철)와 새정치민주연합(원내대표 이종걸)의 원내수석부대표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 추석 연휴를 전후로 두 차례 나눠 실시하는 국정감사 일정에 최종 합의하고, 9월 10일부터 23일까지 국감을 실시한 뒤 10월 1일 다시 재개, 8일까지 실시했다. 여성가족위원회와 운영위원회는 각각 1일과 2일씩 별도 일정을 잡아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 2015년도 국정감사의 특징 중 하나로 지난해(2014년)에는 국정감사 직전에 '세월호 특별법' 논란 관련 국회가 장기파행을 하여 국감 실시여부까지 불투명한 상태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극적합의로 정기국회 기간 중에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올해에는 이러한 극적합의가 아닌 정상적인 합의에 의해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당의 당 내부 문제로 국정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즉, 국정감사 직전에 여야가 모두 선거구 관련으로 인해서 내홍이 있었고, 특히 여당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로 인해서 어수선했고, 야당의 경우에는 당개혁과 대표의 재신임연계로 인해 어수선했던 가운데 실시하였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처음에 세월호 국정감사라고 할 정도로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여야간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었으나, 세월호 침몰사고관련 증인(이준석 선장 등)의 불출석으로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해 관심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올해에는 메르스 국정감사라고 할 정도로 메르스 사태에 대한 집중조명이 예상되었으나,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출불석과 청와대 국정감사 증인 채택 논란으로 메르스 국정감사가 무산되었다.

○ 감사위원회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제외한 297명의 국회의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수감 중인 3명(김재윤, 박기춘, 조현룡 의원)의 국회의원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무위원을 겸임하고 있는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교육부 장관,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2015년도만),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2015년도 한),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을 제외하면 실제로 감사활동을 한 의원은 최다선인 안전행정위원회 서청원 의원(7선)을 비롯하여 288명이었다.

한명숙 전 총리(국회의원)의 확정판결로 인해 8월 24일 자로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하신 신문식 의원이 9월 1일 비례대표 승계선서를 하고, 국정감사 위원으로 활동을 하였으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박주선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을 9월 22일 탈당하여 무소속이 되어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수가 줄었다. 참고로 10월 12일 국정감사 내내 결석을 했던 심학봉 의원의 사퇴서가 본회의(제5차)에서 수리되었다.

〈교섭단체별 의석수 현황〉

9월 22일 화 현재

교섭단체 \ 선거구	지역구	비례대표	계	비율(%)
새누리당	132	27	159	53.3
새정치민주연합	107	21	128	43.0
어느교섭단체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7	4	11	3.7
계	246	52	298	100

행정부에서도 9월 1일 국무위원(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 이 신입인사를 하였는데, 정식 임명장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국정감사 중에 업무파악이 안되어 질타를 받기도 하였음.

○ 국회가 감사를 실시한 대상기관은 2014년도 국정감사의 경우 672개 기관이 감사대

상기관이었으나, 708개 기관이었으며, 이 중 위원회 선정기관은 국가기관 287개,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청 31개 및 공공기관 319개 기관으로 지난해보다 증가했고,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 역시 46개에서 77개 기관으로 증가하였다. 정보위원회는 국감시작 전이 아닌 본 국정감사가 진행된 후에 국감계획서가 채택되었다.

○ 국정감사 일수는 전임상임위원회의 경우 9월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30일간(추석기간을 제외하면 줄어들고, 지난해 21일간), 겸임 상임위원회의 경우 3일간 실시되었으며, 감사기간 중 감사일수는 지난해와 같은 161일(겸임위 제외 158일)이었으며, 안전행정위원회의 1일차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다시 국정감사를 하였으나, 전체적인 국정감사 일정에 변동은 없었다.

제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9월 10일 오전 9시 6분 국방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부터 시작되었다. 이 기간 동안 총 감사시간은 1352시간 41분(지난해 1467시간 46분, 겸임 20시간 35분 제외)으로 지난해 보다 약 115시간 정도 줄었으며, 전체 감사위원의 평균 출석률은 지난해와 같은 93.7%(2014년도 93.77%, 2013년도 97.2%)였다.(겸임위 국감, 시찰 제외)

○ 감사기간 중 국회방송은 지난해와 같은 십수 회의 국정감사를 생중계하였으며, 국회 본청에서 이루어진 73회(겸임포함 77회)의 국정감사는 국회 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에 의해 영상회의록으로 제공되었으며, 제18대 국회 2010년도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외부 국정감사를 녹화하여 영상회의록으로 제공하기 시작하여 이번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외부국감과 국회방송 생중계 국감을 영상회의록에 올려놓아 총 107개(겸임포함 111개)의 영상회의록(2015. 11. 8.기준 지난해 2014. 11. 13.기준임)을 통해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015년도 국정감사 주요통계 >

위원회 (위원장)	감사 위원수	파감 기관수	감사 일수	국정감사 진행시간	국회사 용일수	화상모니터 링가능 영상회의록 (지난해)	감사위원 출석률 (지난해)
법제사법 (이상민)	16	72(71)	12(12)	119:04 (140:55)	2(2)	6(5)	100% (97.32%)
정 무 (정우택)	24	44(56)	11(13)	102:29 (119:12)	6(7)	8(9)	94.6% (93.92%)
기획재정 (정희수)	26	28(28)	12(12)	119:24 (127:58)	6(6)	8(7)	92.9% (91.48%)
미래창조 과학방송 통신 (홍문종)	23	77(72)	12(11)	97:14 (106:28)	8(10)	11(11)	86.5% (92.50%)
교육문화 체육관광 (박주선)	30	118(98)	12(12)	143:21 (158:35)	8(8)	10(9)	97.5% (94.57%)
외교통일 (나경원)	23	30(34)	14(15)	67:57 (83:24)	3(3)	3(4)	85.5% (85.87%)
국 방 (정두언)	17	52(53)	13(12)	68:54 (85:26)	4(3)	6(4)	94.8 (91.18%)

위원회 (위원장)	감사 위원수	피감 기관수	감사 일수	국정감사 진행시간	국회사 용일수	화상모니터 링가능 영상회의록 (지난해)	감사위원 출석률 (지난해)
안전행정 (진영)	21	34(23)	12(12)	106:59 (108:58)	5(3)	13(9)	95.2 (91.92%)
농림축산 식품해양 수산 (김우남)	19	57(42)	14(13)	116:56 (110:40)	5(6)	11(8)	98.1% (91.81%)
산업통상 자원 (노영민)	30	55(55)	12(12)	105:22 (111:23)	7(10)	8(10)	94.0% (96.67%)
보건복지 (김춘진)	21	32(37)	12(11)	107:28 (119:48)	7(7)	9(12)	93.3% (98.64%)
환경노동 (김영주)	16	59(55)	11(12)	96:05 (85:41)	7(5)	9(7)	87.5% (95.96%)
국토교통 (박기춘)	31	36(29)	11(11)	101:28 (109:18)	2(2)	5(4)	95.3% (97.15%)
계	297 (299)명	694 (653)개	158 (158)일	1352시간41분 (1467시간46분)	70 (73)일	107(99)개	평균 93.7% (93.77%)

- 〈참고〉 1. 국감당시 국회의원 현원은 300명중 국회의장 정의화 의원을 제외한 299명이 감사활동을 하였음.
 2. 감사시간은 국회공보를 기준으로 한 시간이며, 일부위원회에서 국회공보와 모니터위원의 보고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국회공보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것임. 국회운영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를 포함하면 감사시간은 20시간 35분이 더 증가함.
 3. 외교통일위의 감사대상기관은 해외국감까지 포함시키는 수치임.
 4. 화상모니터링 가능 영상회의록은 관심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국회의원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해 화상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국회내부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와, 국회방송을 통해 중계된 국정감사 그리고, 외부기관에서 녹화하여 올려 놓은 국정감사의 총합을 표시함. (2015년 11월 8일 기준임)
 5. 위원장 굵은글씨는 지난해(2014년도 국정감사)에서와 달리 위원장이 변경된 경우임.

＜ 점입 상임위원회 통계 ＞

위원회 (위원장)	감사 위원수	감사대상 기관수	감사 일수	국정감사 진행시간	국회사용 일수	화상모니터 링가능영상 회의록	감사위원 출석률
국회운영 (원유철)	28	8(8)	2	20:02 (11:22)	2	3	96.4% (100%)
여성가족 (유승희)	16	6(6)	1	11:35 (9:13)	1	1	100% (100%)

※ 이상의 모든 수치는 국회법상 비공개인 국회정보위원회는 제외된 것임.

○ 감사기간 중 2015년도 상임위원회는 증인채택논란으로 정무위원회가 파행을 하고, 행정안전위원회가 피감기관의 발언문제로 반쪽국감을 하는 등 첫날부터 매끄럽지 못했고, ‘정부의 노동개혁 기자회견’ 논란 등으로 인한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영주)가 파행을 하였으며, 지난해 누리과정 예산배정 논란으로 파행을 하였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박주선)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파행을 하였으나, 대부분 순조롭게 감사가 진행되었다. (후반기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의 증인불출석으로 메르스 국정감사는 실시되지 못함)

○ 국정감사 중 결석을 가장 많이 한 의원은 수감 중인 의원과 국무위원 겸임위원을 제외하고도 심학봉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완구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송광호 의원(청가, 보건복지위원회)으로 전체 국정감사 중 하루도 참석을 하지 않았으며, 그다음으로 김무성 새누리당 대 당대표로 현장시찰을 제외하고 10일 중 9일 결석하였다.

○ 이번 국정감사 중 이슈로 부상한 것은 하도 많아서 기억을 할 수 없다는 방위사업 비리문제와 수류탄사고 등과 관련된 불량군수품 문제, 메르스 사태에 따른 대응부재 문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이산가족 상봉관련문제, 당대표 등 대선유력후보자의 친인척, 자녀문제, 헌법불합치결정이 난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구획정 논란 등등이었고, 매년 반복되는 산하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모럴 해저드 실상과 공기업 부채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 2015년(19-4)국감 피감기관 분석

제19대 국회 피감기관 수 역대최대(708개, 중복피감기관까지 845개). 하루 20개 이상 기관을 감사하는 경우 6회나

**무더기 피감기관 (하루 5.79개)은 '수박 겉핥기식' 국감의 구조적 원인
피감기관이 많아 답변시간은 없거나 태부족, 국정감사의 실효성 반감**

◆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2015년 국정감사 피감기관(감사대상기관) 분석 ◆

- 하루 평균 감사대상기관수 : 5.79개 -- 부실국감 뻥해
- 하루 20개 이상 기관 감사 : 6회 (정무 1, 미방 2, 교문 3)
- 질의·답변시간 분석해 보니 : 질의만하고 답변은 안들어
- 피감기관의 5개 이상 복수선정의 문제점 (사례: 9월21일 미방위국감)
 - (1) 감사시간의 절대 부족 : 1개 기관당 1시간 5분 국감
 - (2) 감사위원의 질의시간 편중 — 특정 피감기관에 집중
 - (3) 피감기관의 국회의원 질의에 대한 대기시간 과다
- 20개 이상 과다 피감기관의 사례 (9월18일 교문위 국감)
 - (1) 25개 기관 국정감사에 7개 기관은 답변기회조차 없어
 - (2) 피감기관 10분 미만 답변이 대부분(25개 중 23개관)
 - (3) 한국문화정보원장은 하루 종일 겨우 3초 답변
 - (4) 의원질의는 4시간 9분, 25개 기관의 답변은 1시간 21분 불과
- 피감기관 수 줄고, 질의에 답변시간 포함되지 않으니 효율적 진행
 - 10월 1일 기재위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

1. 과다 피감기관선정은 결국 부실국감으로 이어져

답변기회 없는 '병풍' 증인 없애고 국감 때에는 국감에만 집중해야

국정감사NGO모니터단(270개 전국의 전문분야 NGO들이 연대한 국정감사종합모니터 연대기구)을 17년째 총괄주관하고 있는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총재 김대인)가 역대 최대 피감기관을 자랑(?)한 이번 국정감사의 감사일수와 피감기관을 종합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다.

이번 조사를 총괄한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국회가 국정감사를 하는 이유는 피감기관의 업무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정부나 해당기관에 대해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 조정 등 시정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 하나의 목적(국감법 제16조 제2항)이다.” 라면서, 20대 국회에서는 마구잡이 피감기관의 선정을 지양하고, “① 국정감사의 목적에 맞는 피감기관의 선정, ② 피감기관에 대한 치밀한 사전 조사, ③ 방위사업청과 같이 문제 피감기관에 대한 선택·집중적 감사로 문제의 근원을 뿌리 뽑는 감사, ⑥ 답변도 없는 병풍 피감기관의 해소 등을 통해 국감 본연의 기능을 살려야 한다” 고 강조했다.

2. 피감기관이 많을 경우 국감정감사 질의시간이 답변시간보다 크게 많아

게다가 의사진행 발언 등으로 비효율적 진행 문제 커

(1) 3개 위원회 분석결과 국회의원 질의와 답변시간의 차이 최소 2배

국회의원들이 감사 중 1문 1답을 통해 질의하고 답변을 하여야 하는데, 질의시간이 답변시간이 최소한 2배 이상 3배까지 많았다. 교문위의 9월 18일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의 질의시간은 4시간 9분 12초였는데, 25개 피감기관의 답변시간은 겨우 1시간 21분 11초에 불과했다.

교문위의 서울교육청 등 9월 21일 국정감사에서도 전체의원의 질의시간은 6시간 13분 31초 였는데, 3개 피감기관의 답변시간은 겨우 1시간 44분 50초에 불과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역시 9월 21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시간은 1시간 25분 13초에 불과했다.

〈3개 위원회의 국정감사 질의시간 및 답변시간 분석결과〉

구분 \ 국감일자	교문위 9.18	교문위 9.21	미방위 9.21
기관 증인	25	3	5
전체 국감시간	7:34:44	9:24:07	5:21:41
의원 질의시간	4:09:12	6:13:31	2:49:29
피감기관의 답변시간	1:21:11	1:44:50	1:25:23

(2) 다수 피감기관시, 의사진행발언이 피감기관의 답변시간보다 많은 경우도

9.18 교문위 국정감사에서는 피감기관의 답변시간이 1시간 21분이나, 의원들의 발언시간이 2시간 04분으로 피감기관의 국감답변시간보다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시간이 더 긴 현상이 나타났다.

9.21 교문위 국정감사와 9월 21일 미방위 국정감사에서도 피감기관의 답변시간과 의원들의 발언시간이 크게 차이가 없었다.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에 집중하지 못하고,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의사진행발언이나 정쟁으로 국정감사 시간이 허비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의사진행발언과 피감기관의 답변시간 비교〉

구분 \ 국감일자	교문위 9.18	교문위 9.21	미방위 9.21
기관증인	25	3	5
전체 피감기관의 답변시간	1:21:11	1:44:50	1:25:23
질의 답변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2:04:21	1:25:46	1:06:49

3. 반면, 피감기관수가 줄고 답변시간에 제한이 없자 피감기관의 답변시간 늘고 국회의원의 추가질의도 줄어 효율적 국정감사로 진행

9월 15일에 기획재정부의 국정감사에서는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의 답변시간 부족으로 한바탕 논란이 되었다.

그 후 답변시간을 질의시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피감기관수도 2개로 적었던 기획재정 위원회의 10월 1일(목)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를 분석해 본 결과, 피감기관의 답변이 국회의원의 질의시간과 비슷해졌다.

국회의원의 질의시간은 4분이었으나,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자, 짧은 답변을 주문하는 멘트가 사라지고, 답변을 충분히 들은 후 질문을 하였기 때문에 추가질의도 없었다.

2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로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이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 2시간 30분대로 비슷해 졌다.

총 국정감사시간은 10시 8분에 시작하여 저녁 8시 31분까지 진행되어 중식시간등을 제외하고 총 8시간 1분 52초 감사를 했다. 질의 응답시간 외에 위원장발언과 자료요구 등으로 1시간 10분 5초가 소요되어, 교문위의 의사진행발언으로 소요된 시간보다 짧았다.

〈기획재정위원회의 10월 1일 국정감사 질의 및 답변시간 현황〉

피감기관	질의시간	답변시간	비고
한국수출입은행 이덕훈 은행장	2:33:34	2:32:48	기관증인
한국조폐공사 김화동 사장	0:50:30	0:42:13	기관증인
총감사시간	08:01:52	일반증인 등 증인신문시간 포함.	

4. 하루 평균 5.79개 기관에 대해 감사해 실효적 감사 어려워

원천적으로 '수박 겉핥기식' 국감이 될 수 밖에 없어

2015년도 국정감사는 역대 최대인 708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하는데, 종합감사 등 중복감사를 받는 것을 합산하면(845개) 국회 상임위원회가 1일 평균 5.79개 기관을 감사하는 꼴이었다.

이러한 다중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1) 한 기관에 대한 감사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2) 여러 개 피감기관 중 한 개 피감기관에 질의가 편중되어 감사가 소홀해지는 국정감사가 진행되며, (3) 감사시간 중 질의를 위해 대기하며 낭비하는 시간이 많아지

는 병폐가 발생했다.

〈사례〉 미방위의 9월 21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하루에 평균 5.79개 기관을 감사하는데, 5개 기관을 감사한 미래방송위원회의 9월 21일 사례를 살펴 본 바,

(1) 1개 기관당 평균 감사시간 : 1시간 5분

9월 21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등 국정감사에서 23명의 감사위원으로 편성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총 감사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5시간 21분 41초였다. 하루 5개 기관으로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한 개 기관당 국정감사의 실질적인 평균 1시간 5분에 불과했다.

의원의 질의시간은 모두 2시간 49분 29초에 불과하였고, 피감기관의 답변시간은 1시간 25분 23초에 불과했다.

참고로, 정부위원회의 9월 18일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주)에 대한 국정감사도 총 7시간 51분 진행하여 피감기관 당 하루 평균 국정감사 시간은 1시간 30분에 불과했다.

(2) 국회의원의 일부 특정 기관에 대한 질의 집중

개별 국회의원이 질의하는 대상기관은 5개 중 2.77개였고, 2.3개 기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았다.

감사위원들을 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다.

한 개 피감기관에 대해서 국회의원 23명 중 5인 미만 질의를 한 경우도 5개 피감기관 중 2개나 되었다. 감사의 집중도가 떨어지게 된 것이다.

(3) 하루 종일 의원의 질의만 기다리며 시간낭비

오전 10시부터 17시 55분까지 하루종일 한국데이터베이스 원장은 의원 3명으로부터 4분 17초 질의를 받고 4분 58초 답변을 하는데 불과했다.

또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은 하루 종일 5명의 국회의원으로부터 10분 8초 질의를 받고, 5분 26초 답변을 하였다.

〈피감기관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질의 및 피감기관의 답변시간 현황〉

증인/참고인	피감기관/소속	질의의원수	질의시간	답변시간	비고
윤종록 원장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2	0:39:28	0:18:59	기관증인
백기승 원장	한국인터넷진흥원	18	1:11:56	0:38:04	기관증인
김명룡 위원장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5	0:10:08	0:05:26	기관증인

증인/참고인	피감기관/소속	질의의원수	질의시간	답변시간	비고
서병조 원장	한국정보화진흥원	13	0:30:31	0:12:24	기관증인
이영덕 원장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3	0:04:17	0:04:58	기관증인
강성주 인터넷융합정책관	미래창조과학부	8	0:08:49	0:04:30	기타
최재유 2차관	미래창조과학부	2	0:04:20	0:01:02	기타
계			2:49:29	1:25:23	

5. 하루 평균 20개 이상 과다 피감기관 국정감사의 문제점

(1) 의원별 평균 질의기관은 3.59개 나머지, 21개 기관은 질의 못해

실제로 25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9월 18일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분석해 보면, 한 의원이 질의를 한 피감기관 수는 평균 3.59개로 의원이 다른 21개 기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

(2) 피감기관 하루종일 10분도 답변 못한 경우가 25개중 23개 기관

피감기관의 입장에서는 답변기회를 가장 많이 가진 피감기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박명진 위원장으로 21분 53초였고, 22명의 의원이 박명진 원장에게 질의를 하였다. 그 다음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 송성각 원장이 10분 15초를 답변하였으며, 13명의 의원이 송원장에게 질의를 하였다. 나머지 16명은 질의를 하지 않았다.

나머지 23개 기관은 10분 미만의 답변을 하였다.

(3) 29명 의원 중 누구도 질의를 하지 않은 병풍 피감기관은 7곳

답변을 전혀 하지 못한 기관, 다시 말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29명 국회의원(위원장 제외) 중 누구로부터도 한 번도 질의를 받지 못한 피감기관이 세종학당재단,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문화원연합회, 예술경영지원센터, 국악방송 등 7곳이었다.

(4) 한국문화정보원 원장의 답변시간은 단 3초에 불과

국정감사 시간은 오전 10시 13분부터 오후 7시 39분까지 실제 감사시간만 7시간 34분 44초 동안 말을 할 기회가 1분이 채 되지 않은 피감기관의 장은 3명이었다. 김성곤 한국문학번역원 원장은 2명의 의원으로부터 1분 50초 질의를 받아 11초간 답변을 하였다. 정현욱 명동정동극장 극장장은 1명의 의원으로부터 3분 19초 동안 질의를 받았고, 35초 답변을 하였다. 김소연 한국문화정보원 원장은 한 의원(박인숙 의원)으로부터 2분 09초 동안 질의를 받았는데, 정작 답변은 3초간 하였다.

(5) 전체의원(29명) 중 5인 미만의 의원이 질의한 피감기관 17곳

그 기관에 대해 나머지 25명의 의원은 질의 하지 않아

국정감사중 감사위원의 질의가 피감기관이 많더라도 특정 피감기관에 집중되었다. 나머지 피감기관은 의원의 관심사에서 소외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9명의 감사위원(위원장 제외) 중에서 5인 미만의 의원만 질의를 한 곳이 17곳이나 되었고, 29명중 1명 의원만 질의를 한 곳도 4곳이나 되었다.

〈피감기관별 교육문화체육위원의 질의 및 피감기관의 답변시간 현황〉

증인/참고인	피감기관/소속	질의 의원수	질의시간	답변시간	비고
송성각 원장	한국콘텐츠진흥원	13	0:27:49	0:10:15	기관증인
김병호 이사장	한국언론진흥재단	9	0:21:38	0:05:41	기관증인
방석호 이사장	국제방송교류재단	5	0:15:05	0:03:01	기관증인
이재호 원장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6	0:12:06	0:01:42	기관증인
박용상 위원장 등	언론중재위원회	6	0:09:05	0:03:32	기관증인
김세훈 위원장	영화진흥위원회	11	0:22:39	0:09:26	기관증인
이경숙 위원장	영상물등급위원회	4	0:10:36	0:01:53	기관증인
이원태 연구기획조정실장	한국관광연구원	1	0:01:57	0:00:36	기관증인
여명숙 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	6	0:21:35	0:06:15	기관증인
오승종 위원장	한국저작권위원회	2	0:10:00	0:01:09	기관증인
송향근 이사장	세종학당재단	0	0:00:00	0:00:00	기관증인
김성곤 원장	한국문학번역원	2	0:01:50	0:00:11	기관증인
고학찬 사장	예술의전당	1	0:00:47	0:01:48	기관증인
박명진 위원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2	1:04:56	0:21:53	기관증인
주성혜 원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5	0:08:39	0:06:36	기관증인
김형태 사장	국립박물관문화재단	0	0:00:00	0:00:00	기관증인
정현욱 극장장	명동정동극장	1	0:03:19	0:00:35	기관증인
김승국 상임부회장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0	0:00:00	0:00:00	기관증인
최정철 원장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0	0:00:00	0:00:00	기관증인
이경동 회장	한국문화원연합회	0	0:00:00	0:00:00	기관증인
박계배 대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3	0:05:53	0:01:57	기관증인
김소연 원장	한국문화정보원	1	0:02:09	0:00:03	기관증인
김선영 대표	예술경영지원센터	0	0:00:00	0:00:00	기관증인
채치성 사장	국악방송	0	0:00:00	0:00:00	기관증인
이병훈 원장	한국영상자료원	3	0:02:38	0:01:35	기관증인
이한신 원장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3	0:06:31	0:03:03	참고인
계	26		4:09:12	1:21:11	

6. 1일 감사대상기관 과다 부실국감은 명약관화

10개 이상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21회

20개 이상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도 6회**(1) 하루 5개 이상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이 진행되는 경우는 총 61회****전체 국감 중 42.7%에 달해**

하루에 한 개 피감기관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하는 경우는 32회였고, 2~4개 피감기관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하는 경우는 50회였으며, 5~9개 피감기관에 대해서 하는 경우는 34회였다.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다소 많았으나, 이러한 경우 일반증인을 선정하여 국감 중간에 증인신문으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많았다.

예컨대 9월 17일 정부위원회의 경우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3개 기관에 불과했으나,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등 일반증인 20명, 참고인 8명이 출석하여 국정감사 시간 절반이상을 증인신문에 할애하여 결국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정상적인 국정감사는 하지 못하였다.

〈피감기관수별 국정감사 진행횟수〉

상임위	피감기관수 국감횟수	1	2~4	5~9	10~19	20개이상
법제사법		2	4	2	4	0
정무		2	4	3	0	1
기획재정		4	5	2	1	0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2	3	2	1	2
교육문화체육관광		0	1	4	4	3
외교통일		2	9	1	0	0
국방		3	1	3	2	0
안전행정		3	6	1	1	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5	3	2	4	0
산업통상자원		2	1	5	2	0
보건복지		1	7	2	0	0
환경노동		4	0	4	2	0
국토교통		2	6	3	0	0
계		32	50	34	21	6

(2) 5개 이상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위원회는**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산업통상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순**

이번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이 가장 많은 위원회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118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데, 국정감사 12일(현장시찰 제외, 이하 같음) 중 11일이 5개 이상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다음으로 55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경우에는 10일 중 7일간 5개 이상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 피감기관이 59개로, 5개 이상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전체 10일 중에서 6일이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전체일정 중 50%가 5개 이상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상임위원회 국감일수와 5개 이상 피감기관 대상 국감일수 비교〉

상임위	피감기관수	피감기관이 5개이상인 경우	총 국감일수	비율
법제사법	72	6	12	50.00%
정무	44	4	10	40.00%
기획재정	28	3	12	25.00%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77	5	10	50.00%
교육문화체육관광	118	11	12	91.67%
외교통일	30	1	12	8.33%
국방	52	5	9	55.56%
안전행정	34	2	11	18.1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57	6	14	42.86%
산업통상자원	55	7	10	70.00%
보건복지	32	2	11	18.18%
환경노동	59	6	10	60.00%
국토교통	36	3	11	27.27%
계	694	61	144	42.36%

* 피감기관수 국회운영 8개, 여성가족 6개 등 14개 미포함.

7. 제19대 국회 국정감사 대상기관 통계

- (1) 이번 2015년도 국정감사의 피감기관 수는 708개이다. 겸임상임위를 제외한 13개 상임위원회 국감피감기관 수는 평균 54.46개이다.
- (2) 50개 이상 피감기관을 감사하는 상임위원회는 8개 상임위로 법제사법,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교육문화체육관광, 국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 보건복지, 환경노동위원회이다.
- (3) 현장시찰을 제외한 국감일수는 146일이다(전체 국정감사 일수는 161일.).
1일 평균 피감기관 수는 5.79개이다.
- (4) 1일 5개 이상의 피감기관을 감사하는 경우는 총63회이고, 1일 5개 이상의 피감기관을 감사하는 일자의 피감기관을 모두 합하면 670개이다.

《 국정을 감사하는 감사위원이 감사장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책무다. 》

감사위원들께서 (국정)감사장에 반드시 참석하고 자리를 지켜야(坐定) 할 5가지 필요성

1. 수감기관(대개 20~40명)을 압도하는 숙연한 감사분위기를 위해서라도 감사위원(국회의원) 전원이 감사위원석에 좌정(坐定)할 필요가 있다고 봄
국정감사가 수감기관에 대해서 기관단위로, 즉 국회(상임위 감사반)가 감사하는 것이라면 감사위원석이 텅 빈 채 질의하는 감사위원 한 사람만 남아서 감사하는 것이 옳은지? 효율적인지? 그렇다면 전체 감사위원석(15~31석)을 상설하기보다는 한사람씩 올라가서 질의하는 감사위원 좌석을 (감사장 전면)에 하나만 설치하는 것은 어떨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감사위원이나 피감기관 등의 “심상치 않은 여러 상황(소위 변론의 전 취지)등”을 파악·대처하기 위해서도 ‘자리지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설사 감사장 밖 의원실 등에서 TV 화면으로 타 의원의 질의내용을 시청한다고 하더라도, TV 카메라만으로는 감사장 전체를 확인할 수 없는 여러 상황이나 민감한 부분이 있을 뿐더러, 그나마 집중해서 보지 않는다면 충실한 감사의 결실을 얻어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3. 피감기관의 교묘한 회피성 답변에 대한 승복을 받기 위해서도 좌정이 필요하다고 봄
교묘한 회피성 답변으로 “질의와 감사를 무색하게 만드는 피감기관”이 적지 아니한데,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수감기관의 승복을 받아 내려면 회피성 답변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라도 타 의원과 수감기관의 질의응답을 꼼꼼히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4. 중복·반복질의를 피하기 위해서도 좌정이 필요하다고 봄
많은 상임위에서 중복·반복질의로써 연중 20일에 불과한 국정감사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바, 수감기관에게 ‘실상을 모르는 허술한 감사’로 알보이지 않고, “다른 의원이 방금 전에 했던 질의를 똑같이 다시 질의하는” 중복질의만이라도 피하자면 감사위원의 ‘자리지킴’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5. 국감직후에 있는 예산국회와 입법과정의 자료수집을 위해서도 좌정이 필요하다고 봄
감사위원으로서의 ‘질의준비’ 또는 ‘국감 외의 다른 업무처리’를 ‘이석’의 사유라 할 수 없으며, 감사당일에는 타의원의 질의내용이나 피감기관의 답변 등을 경청함으로써, 국감직후에 있을 예산국회와 입법과정에 긴요한 자료를 수집·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감사장을 꼭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그러나, 본 NGO모니터단의 출석·이석체크는 우수의원 선정을 위한 평가의 주요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첫째, 마라톤 경주에서 완주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가를 하지 않는 것처럼 이틀이상 결석 시에는 우수의원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 왔던 것이며, 둘째, 이석 상황은 정성평가 결과가 동일하거나 비등한 우수의원 후보의 경우에 이를 참작하여 가·감정평가를 하여 왔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